

4대강의 운명, 죽임과 살림의 선택 사이에서1)

정리: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1. 논란에 휩싸인 4대강, 안타까운 현실

1) 4대강 사업이란

‘4대강 사업’이란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나라 국토의 생명줄인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새롭게 정비, 개조하기 위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토목건설 사업으로, 2009년에 시작해서 2012년까지 완료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열어가는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으로, ‘홍수 예방’과 ‘물 부족 문제 해결’,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창출해냄으로써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2) 논란의 한가운데서

그런데 이러한 4대강 사업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²⁾, 시민사회, 종교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과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종 시위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해왔고,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은 ‘생명의 강’을 살리기 위한 기도회와 순례 활동 등을 이어 왔으며, 최근에는 급기야 천주교 주교회의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전례 없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4대강 사업은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거두어 국운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터인데 오히려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70% 이상이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³⁾ 과연 이러한 결과가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 사업의 실제 목적과 내용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기 때문’ 이거나 또는 ‘반대만을 일삼는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 때문’ 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의 원인을 사업의 실제적 진실에 대한 무지(無知)나 진정성에 대한 의도적인 폄훼(貶毀)로 돌려서는 문제 해결은커녕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각자가 처한 이해관계나 이념의 잣대를 내려놓고 4대강 사업이 가진 구체적인 내용과 논란의 핵심을 분명하게 살피면서 현명한 판단과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1) 이 글은 최병성 님이 저술한 책 <강은 살아있다>(2010, 황소걸음)와 대한하천학회에서 발간한 자료집 <이 아름다운 강을 지킵시다>(2010), 그리고 주요 일간지 기사 자료와 관련 활동을 하는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하여 재정리 한 것입니다.

2) 여야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조차 소위 친이와 친박으로 나뉘어 4대강 사업을 놓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3)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즉각 중단이 26.4%,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진 후 추진이 47.1%로 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73.5%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경향신문, 2009년 10월 6일자).

3) 안타까운 현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4대강에 대한 찬반 양론의 다양한 주장과 정보들이 사회적으로 널리 소통되어서 상식과 양심에 따른 국민들의 판단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는데, 지금의 언론들은 사실에 대한 침묵이나 편향된 보도로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실 보다는 사건 중심의 갈등을 다룸으로써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 주도 하에 4대강 사업이 일방적으로 급속히 추진됨으로써 갈등과 부작용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은 규모와 속도 측면에서 사회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변형을 일으켜 미래세대에 까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국민 모두의 지혜가 모여져서 신중을 거듭한 판단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국민들은 왜 이러한 초대형 국책 사업을 국민 다수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현 대통령 임기기간 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지, 그 어떤 비판과 무리가 따르더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만큼 4대강 사업이 절박한 국가적 과제인지 정말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내몰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소통 불능의 오만함에 대한 국민들의 답답함과 거부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타깝고도 불행한 점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에 비추어서도 사업의 추진 과정과 내용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장비를 동원한 4대강 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자신들에 있음을 자각하고 시민사회와 종교계,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물음과 우려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입증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4대강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공유 자산이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한 부담과 혜택도 결국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사업 성격과 추진 과정에 대한 논란

1) 사업 성격을 둘러싼 의혹

4대강 사업의 성격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에는 이 사업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것이 자리하고 있다. 4대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을 운하 건설을 위한 예비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인식에는 나름의 근거들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80% 이상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4대강 사업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대운하 사업의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그 해 12월 4대강과 관련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시 정부는 사업 규모나 성격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은 결코 운하 사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4대강 사업의 성격이 운하 사업으로 변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즉 2008년 12월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발표되었던 것이 2009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고, 보의 수도 5개에서 16개로 늘리고 준설을 통해 보의 높이도 기존 수심 2m에서 배가 다닐 수 있는 6m로 높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의 배경에는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부처와 연구기관이 그대로 4대강 사업을 도맡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⁴⁾

이처럼 4대강 사업은 등장 과정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및 내용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이 의혹의 불씨를 운명적으로 안고 있었으며, 계획이 발표된 이후 규모와 내용 등 사업의 성격이 일관성 없이 계속 바뀌으로써 논란을 확대 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2) 사업 배경에 대한 논란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기본 배경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상당하다. 즉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자'라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살아있는 강을 죽인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된 '죽음의 강'으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획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⁵⁾ 이를 위해 대규모 준설 작업을 통해 강바닥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보를 설치하여 수량을 풍부하게 하며 강 유역을 정비하여 생태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포크레인과 불도저, 트럭 등 대형 중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랜 세월을 통해 형성된 자연생태계가 순식간에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되면 결국 강은 회복 불가능하게 생명력을 잃고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정부가 조사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들어 4대강 사업구간에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총 68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100여개 습지들이 분포하는 등 생명이 살아 있는 곳인 만큼,⁶⁾ 강 바닥에 쌓인 오염물질 정화와 하천변의 생태적 복원은 자연의 원리에 맞게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사업 추진 과정과 절차의 문제점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합당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공고를 내고 시공업체도 선정해서 이미 사업이 시작된 만큼, 이것을 비판하고 돌이키려하는 행위 자체가 타당성과 설득력을 상실한 행위라고 주장 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온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졸속 추진에 따른 부실들이 발견되어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22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충분한 예비조사와 여론수렴 과정 없이 5개월 여 만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확정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총 공사길이 634km에 이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4개월 만에 마친 것은 부실 조사와 졸속 추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나 국민의견 수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사업 추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4)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곳이 바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인데, 이 기관의 연구원으로 4대강 계획에 참여했던 김이태 박사가 본인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2008년 5월 25일에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바 있다.

5) 정부는 4대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홍보 자료에 외국의 오염된 강의 사진을 4대강 오염의 오염 현상인 것처럼 꾸미는 무리를 범하기도 하였다.

6) 정부가 죽음의 강으로 부르는 낙동강 유역은 해마다 13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다.

조차 충분한 설명과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결국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이 국가 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 평가법, 문화재 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사업으로 규정하고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이 질차적 무리수를 두게 된 데는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이 사업을 완료시키려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결과로 평가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임기 말에 평가를 받겠다는 것 자체가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사업 내용에 대한 쟁점별 정리

1) 홍수에 대한 예방 문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이유로 '홍수 예방 효과'를 들고 있다. 즉 기상 변동 등으로 홍수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으로 사전 예방적인 치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근거로 홍수로 인해 낭비되는 연간 예산이 7조원(피해액 2조7천억, 복구비 4조 3천억) 가량이어서, 3년만 지나면 그 효과가 4대강 사업비를 넘어서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홍수 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기상변동에 따른 홍수 피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의 홍수 예방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기상변동과 국지성 폭우 등으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4대강 유역과는 관련성이 적은 지천과 셋강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즉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경우 오랜 기간 투자를 통해 97% 이상 홍수피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4대강의 본류가 아닌 지류 하천의 정비와 도시 지역의 빗물배출 시설 개선 등에 우선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⁷⁾ 뿐만 아니라 4대강 개발로 수량 확보를 위해 일정 수위를 유지할 경우 오히려 지하수위를 높여 홍수의 위험도도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 물 부족 해소 문제

정부는 가뭄 등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들고 있다.⁸⁾ 즉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점을 들어, 향후 예상되는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⁹⁾

사실 우리나라가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점은 각종 환경 캠페인 등을 통해 익히 들어왔던 바다. 하지만 이 논리는 국민의 물 소비 절약을 이끌어내는데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댐 건설을 뒷받침하는 데도 사용되는 등 논란이 많았다. 급기야 참여정부 시절 지속가능발

7)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200년 빈도 홍수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농어촌 지역의 물관리 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도시지역 역시 빗물배출 시설이 1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해 마련된 상태이다.

8) 사실 홍수 예방과 물 부족 문제 해결은 서로 상반된 사업 목표인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9) 다목적 댐 건설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은 큰 저항이나 갈등 없이 수자원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물 관련 전문가와 부처 관계들이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정보는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¹⁰⁾ 2006년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도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반영시킨 바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4대강 사업을 놓고 물 부족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한 점은 의도를 가진 오류로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산간과 도서 일부에서는 해마다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지역이 4대강과는 공간적으로도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물 부족을 이유로 강의 수량을 늘리는 것은 배를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부는 가뭄피해를 줄이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4대강 사업으로 2조3천여 억원을 들여 96개의 저수지 독을 높일 예정인데, 문제는 사업의 목적이 4대강을 일정 수위로 유지시키기 위한 용수를 공급하는데 맞춰져 있으며, 따라서 실제로 가뭄이 취약한 지역의 저수지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3) 수질 개선 문제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이 되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수질이 좋아져 강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4대강 건설로 16개의 보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강의 수량을 풍부해져 그만큼 오염물질이 희석될 것이며, 준설 작업으로 바닥에 침전된 오염물질들을 걷어내면 물이 자연스럽게 더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 보다 물은 고이면 썩듯이 보가 건설되어 물의 흐름이 정체될수록 오염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을 가뭄 수량이 많아지는 것과 물의 오염 농도가 낮아지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상관성이 적다는 주장도 있다. 수질 오염의 핵심은 수량이 아니라 오염물질의 유입 가능성과 물의 흐름 속도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홍수 뒤 물이 깨끗해지기보다 강과 호수가 더 심하게 오염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질을 개선하려면 오히려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보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기 보다는 지류부터 오수 처리를 위한 하수관 매설과 종말처리시설 설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직선형 콘크리트 수로를 뜯어내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진 국가와 우리나라의 하천 살리기 경험들을 통해 이미 충분히 확인하고 있는 바다. 4대강 사업의 근거로 들었던 한강의 수질 개선도 11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류의 오염물질을 차단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또 다른 문제는 대규모의 준설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다. 정부는 준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2K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 공사를 실시하며 오염물질 확산을 방지하는 시설물을 적극 설치,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완공 시기를 못 봐야 놓고 전 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준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식수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¹¹⁾

실제로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의 입자가 작고 가벼워 쉽게 걸러지거나 침전되지 않

10) 미국의 한 민간단체(PAI)가 만든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였고, 이것을 유네스코가 인용하면서 국내에서도 정부와 언론이 환경 보존을 위한 담론으로 사용해 온 것이다.

11) 낙동강 사업구간에만 해도 43개의 취수시설이 존재하고 있어 대규모의 준설작업이 엄청난 식수 오염을 가져다 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 침사지나 방지막이 별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공사가 진행 중인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¹²⁾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으로부터 방출된 오염물질들이 오랜 기간 퇴적된 곳에는 부유물질 속에 중금속 등 위해 성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더구나 강물의 탁도가 높아지면 정수 처리 과정에 응집제 등 투입되는 약품의 양도 많아져 결국 알루미늄 등 건강을 위협하는 잔류물질이 상수도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질 자동측정 체계를 만들어 실시간으로 수질 변화를 관측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로봇 물고기로 4대강의 수질을 관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당 4천만원이 넘는 시험 단계의 장비로 4대강 전역의 수질을 관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보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접근은 수질의 변화를 감시하는 것이지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정부도 부산과 경남지역의 취수원을 2조8천억원을 들여서 옮기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계획대로 2012년까지 낙동강의 수질이 개선된다면 굳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취수장을 옮길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4)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문제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자연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분명히 있으나 죽어가는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시간이 지나면 생태계가 안정되게 복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서 사업 진행 과정에 생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생동물의 산란처 및 은신처를 별도로 제공하고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한 어도를 설치하며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가진 엄청난 규모와 속도, 그리고 사업 추진 방식 등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 한다. 강의 수심이 6m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 강의 바닥을 긁어내는 대규모 준설 작업은 수중 생태계를 사막화 시키고 자정능력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의 수심이 깊어지면 여울과 얕은 수심을 근거지로 살아가던 토종 어류를 비롯한 수많은 수중 생물들은 살아가기가 힘들뿐만 아니라,¹³⁾ 강 주변의 자갈이나 모래밭, 습지 등에서 살아가던 조류, 양서류 등 육상 생물들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먹이가 사라진 곳에서는 철새들도 더 이상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강의 수량 변화는 일조량과 안개일수 등 기상 변화를 가져와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5) 여가 및 문화생활의 욕구 충족 문제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수상 스키와 보트, 유람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수상 레저 및 친수 문화 활동들이 가능해져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4대강변 양쪽 1297km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있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수심이 6m 이상으로 깊어질 경우,¹⁴⁾ 배를 이용한 레저 활동은

12) 대한하천학회 전문가들의 현지조사 결과 준설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 주변의 오탉 방지막 설치 효과가 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해마다 산란기가 되면 한강에서 수많은 잉어들이 수심이 얇고 자갈과 수초가 많은 안양천, 중랑천으로 목숨을 걸고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14) 수심 6m는 아파트 2층 높이에 해당하는 깊이이다.

가능해질지 몰라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강에 발을 담그면서 가족 단위로 물놀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다. 깊은 수심으로 인해 강은 친수 공간이 아니라 위험한 장소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업적 위락 문화에 묻혀 강 주변을 따라 형성되었던 역사 및 문화유적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 강 유역에 매장된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발굴 작업이 줄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추진된 청계천 복원 사업도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귀중한 역사 문화재를 파괴 했다는 비판들이 상당 했었는데, 그래도 청계천 복원공사 경우 문화재 조사 및 발굴에 1년 2개월이 걸렸지만 청계천의 200배가 넘는 4대강 사업 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 조사는 두 달 만에 마쳐 부실 조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화재 발굴 지역이 축소되고 문화재 밀집 매장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6)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SOC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재정 자립 기반이 취약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 실업자가 10%가 넘는 매우 불안정한 경제적 상태를 4대강 사업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생태계 파괴 문제와는 별도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보 설치와 준설작업, 제방 및 댐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 토목건설 중심의 4대강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즉 포크레인, 불도저 등 중장비들을 동원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양과 질 모두에서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토목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 보다는 다소 높지만 농업의 1/5, 교육의 1/2, 보건복지의 2/3 수준이며, 사업 종료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80년 전 미국의 뉴딜 정책 경험을 21세기 오늘날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데 연결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군다나 4대강 사업의 시공을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점하고 이것을 다시 하도급 형태로 주는 건설 방식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강 유역을 따라 상업적 개발이 진행되고 외지 자본이 결합된 투기성 개발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약 2,000km에 달하는 자전거 길이 만들어지면 각 지역의 골목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소박한 낭만에 가깝다.

7) 예산의 적정 운영과 분배 문제

정부의 정책은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22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집중되면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예산들은 왜곡 배분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2010년 예산계획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이나 저소득층 의료 지원비, 장애아동 무상교육지원과 노인 일자리 예산 등 복지 및 교육과 관련한 소위 민생예산들이 대규모로 삭감 조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역에 대한 교부금이나 지원금이 축소되어 지역 차원의 사업 계획들이 축소되는 일들이 빈발해지자 급기야 '4대강이 지역 예산의 블랙홀'이라는 불만들

이 지역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로 4대강 사업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나 재정적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4대강 사업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로 떠넘기게 된 배경에는 국가의 채무비율을 낮춰 보여주고자 하는 정부의 고민들이 담겨 있다. 4대강 유역의 상업적 개발권을 수자원공사가 맡게 된 배경에는 연매출 2.4조원의 수자원공사가 과도하게 떠안게 된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정확히 책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 계획단계 보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몇 배로 더 들어간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 규모가 크고 줄속으로 추진될 경우 더욱 그렇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 초기 8천2백억원에서 1조 3천억원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초기 5조8천4백억원에서 18조4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4대강 사업의 예산도 처음에 14조원으로 시작해서 벌써 22조 2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만약 사업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첫 삽만 뜨면 된다’는 거대 개발사업의 신화가 4대강 사업에서도 재현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별써부터 4대강 사업 예산 책정에 누락된 항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준설 사업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해야 할 다리가 104개나 되고 강 바닥이나 주변을 관통하는 도시가스관도 이전해야 하고 준설로 인해 취수장을 이전하거나 개·보수해야 하는 등 현재 나타난 추가 비용만 해도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 내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향후 4대강 사업의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복구하려면 수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게 되고 그래도 생태계를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¹⁵⁾

8) 농업 및 식량자급 문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풍부한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농업과 식량 증산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인근 지역의 지하수위도 높아져 주변 농지는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낙동강 지역 함안보 건설로 주변 농지에 대한 침수 피해 우려가 제기되어 정부의 사업계획 일부가 변경되기도 했다.¹⁶⁾ 보의 건설로 강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기상 상태에도 영향을 줘서 농작물 생육과 수확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농지가 사라지고 농민들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¹⁷⁾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는 하천변 농경지가 약 5,370만평 정도로 추정되

15) 실제로 유럽 선진국가들의 경우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건설비용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고 시간도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함안보 지하수위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관리수위를 기존의 7.5미터에서 5미터로 하향조정 했다.

17) 농지 수용에 따라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것도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농가들에 한해서다. 그렇지 않은 농민들은 한 푼의 보상비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농사짓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소작으로 농사짓던 농민들의 생계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고 있다. 여기에는 하천변 농사가 수질 오염을 일으키니 금지 시키고 대신 습지와 체육시설,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 생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인식들이 자리하고 있다.

강변에 갈대숲을 조성하는 것으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가 사라져서 먹이도 없어지게 되면 철새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농경지를 없애고 농민을 내쫓고자 하는 4대강 개발 논리를 바꾸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의 이면에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실제로 '유기농 대신 유람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4대강 사업은 친환경 농업의 대표적인 팔당호 유역 유기농업단지와 농민들까지 몰아내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경우 4대강 사업으로 유기농지의 90% 이상이 수용되어 마을의 생산 기반이 송두리째 붕괴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의 유기농지 수용을 반대하면서 토지 측량을 방해하던 농민 10여명을 경찰이 연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 지원과 농민들의 힘으로 30여년에 걸쳐 우리나라 최대의 친환경 농업단지로 자리잡은 곳을 느닷없이 4대강 사업 한다고 없애고 자전거 길과 공원을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¹⁸⁾

농업 및 식량생산과 관련하여 4대강 개발로 나온 대량의 준설토 처리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정부는 약 5억7천만톤에 달하는 준설토 중 건설용 모래를 제외한 나머지 3억1천만톤을 농경지 성토 작업에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준설토 자체가 다량의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식량 오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¹⁹⁾ 최근에는 준설토가 수분함유가 많은 점토질로 확인되어 농경지 성토용으로 부적합 하며, 따라서 성토를 위해서는 고화제나 응고제의 투입을 통한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는 답변만 내놓으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식량 자급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깨끗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4대강 수위조절용 용수 공급 목적으로 저수지 증고 사업에 책정된 2조3천억원의 예산을 전국의 농업용수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투입하면 식량자급과 농가 소득의 향상은 물론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4. 4대강 논란이 주는 교훈과 과제

강은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다. 인류 문명도 강을 끼고 등장하였다. 강이 죽으면 사람도 생명도 죽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미래가 없다'면서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4대강 사업처럼 자연생태계에 대한 개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연결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우리 국토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대한 개발사업을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예비조사 과

18)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른 한쪽에서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해 놓고 300억 규모의 유기농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19)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준설토의 대부분인 무기성 오니는 전량 소각하거나 매립시설에 별도로 매립해야 하며 매립토로 재활용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없이 급속하게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이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들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자연에 대한 오만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나아가 정부에 비판의 차원을 넘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맹목적 성장주의와 반생명적인 개발주의 문화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수많은 개발 행위들은 사실 통치자 개인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 국민 다수의 무관심이나 암묵적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4대강 개발 현장을 찾은 외국의 전문가들조차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정작 이 땅에서 대대손손 살아가야 할 다수의 국민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개발 사업들은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4대강 사업도 이제 봄이 오고 날씨가 풀리면 정해놓은 공정률에 따라 공사의 속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물론 종교인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도 따라서 커질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해하면 이 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죽임과 살림의 기로에 놓여 있는 4대강 유역의 농민들과 못 생명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연 생태계의 못 생명과 미래세대에 책임지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고 소중한 때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물줄기를 만들고 아래로 깊고 넓게 흐르면서 생명의 강을 이루듯이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생명살림의 길을 열어 가는데 양심 있는 시민들이 앞장서야 할 때다.